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1	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	정책분야	재정경제/노동/산업자원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 ○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○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○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리기 <p>□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文정부의 경제정책인 ‘소득주도성장’ 폐기 ○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 (탄력근로제, 선택근로제, 재량근로제 등) - 최저임금 업종별·규모별 구분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포함 ②업종별·규모별 구분 적용 ③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업 확대 - 대기업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 -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 보호 - 대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환 ○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「재정건전화법」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채무준칙 : 국가채무(D1)의 GDP 대비 비율을 40% 이하로 유지 ②수지준칙 :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% 이하로 유지 ③수입준칙 : 국세감면을 직전 3년 평균 + 0.5% 이하 -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 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-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개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 ○ 과감한 규제개혁 실시로 경제살리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관급 기구(가칭 ‘규제개혁처’)설치와 국회 내 규제혁파 상설기구 설치 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개정을 통한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-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 	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2	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	정책분야	사법윤리/ 교육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 ○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○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○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○ 문화·예술·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<p>□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수처 폐지 법률안 발의 ○ 검사 인사 및 예산 편성의 독립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사 인사 실무부서 이관(법무부→대검) -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 추천권 부여 -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(「정부조직법」, 「검찰청법」 개정) -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 ○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(「검찰청법」 개정) ○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- 「변호사시험법」을 개정하여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,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하며,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·실시 ○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전학청원권’ 도입 및 정치적 중립 훼손 교원 징계 강화 및 교단 배제 - 학제개편 및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○ 채용청탁과 고용세습 근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국회에 구성 -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 시 처벌 강화 -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근절 			

○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

-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방지 체계 마련 (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 및 「스포츠기본법」 제정)
-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공정윤리 기반확립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 마련
- 문화예술계·체육계의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당내 '공정윤리 대응반(TF)' 상시 운영지원
- '스포츠윤리센터'의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(스포츠계 전반의 비리와 불공정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점검)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국가재정운영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일몰제 도입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3	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	정책분야	국방/ 통일외교통상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文정부 안보포기 정책 폐기 ○ 한미동맹강화 및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○ 국민안심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○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<p>□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.19 남북군사합의서 등 文정부의 안보포기 정책 폐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△9.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, △대중 3不정책, △한미연합군사훈련축소, △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번복 등 文정부의 안보포기 정책 폐기 ○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강화 및 한미간 '핵동맹' 추진 ○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및 「남북협력기금법」 등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와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 차단 ○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「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」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○ 군인 정년 연장으로 직업 안정성 확보, 육·해·공군 현역 장병 복무 기간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실전 전투력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'현역 복무 프로그램' 개발로 복무 여건 개선 ○ 예비군 훈련수당 인상 및 전역 예정 군인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○ 재외국민 권익 신장 적극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외국민 대상 대형사건사고·해외재난사고 전담 (가칭) '해외재난안전대책본부' 설립 - 재외국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정 확대 추진 - 재외동포 민족교육 강화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추진 <p>□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영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은 33조원 규모 ○ 남북협력기금은 북핵 완전 폐기 때까지 규모 축소하여 재원 전환활용 	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4	안전한 사회, 국민 불안 제로	정책분야	안전/ 보건복지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병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○ 여성·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○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한코로나19 등 원인불명, 치료제 없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종합대책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질병관리본부’를 ‘질병관리청’으로 독립 -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, 이를 경유하는 입국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또는 입국시 검역 및 방역을 철저히 관리 - 감염병 진단 최전선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 강화 -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-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 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- 마스크,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지원 강화 ○ 여성·아동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「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」 제정 - 범행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<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>의 일환으로 「스토킹 방지 특별법」 제정 -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 대처를 위해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 - 몰카범죄 예방 및 무분별한 변형카메라 약용을 막기 위한 「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」 개정 -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「조두순 방지법」(가칭) 마련 (현행법상 접근금지 범위를 100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확대,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거주를 제한, 주취감경 폐지 공론화 등) ○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등학교 주출입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-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, 하교 시간대도 교통관리 경찰관 배치 확대 -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-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영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과 우한코로나19 극복 위한 2020 추가경정예산 활용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	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5	국민공감 부동산 정책	정책분야	건설교통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패한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으로 정상화 ○ 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 공급 ○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<p>□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文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정책을 文정부 출범이전으로 정상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, 종부세 공제금액도 상향 (6억→9억, 1가구1주택자는 9억→12억) -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 인하(300→150%)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- 중산층·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규제 등 전면 재검토 ○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多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 -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, 기존 도시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 추진 - 노후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,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○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 검증이 된다면, 주택담보대출 기준 대폭 완화 -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, 실거주 목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○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료컨설팅 서비스 제공하여 청년주택이 확대되도록 예산확보 및 정책 지원 - 학세권, 역세권,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 제공이 가능토록 지원 강화 <p>□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.5조원(2020년 예산상) 활용하되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민간 R&D확대와 일자리를 통해 세수 자체의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이상으로 확대하여 손실보전 	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6	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	정책분야	과학기술정보통신 /농림해양수산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활성화·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○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<p>□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속·증여세 등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 부담 대폭 경감 - 각종 부담금 존치 필요성과 부과수준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폐지 -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·안전시설 등 투자와 R&D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○ 4차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통해 ‘양질의 일자리 100만개’ 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△4차산업일자리특별법 발의 △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설치 △黨 4차산업 일자리혁명 기구 설치 △黨 상임위별 4차산업일자리 담당 국회의원 배치 -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‘히든 챔피언 기업 100개’ 발굴 ○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 제조업에 맞춰져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산업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- 영상콘텐츠 산업에 제조업의 R&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 마련 ○ 청년 창업·후계농 육성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 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 창업농 지원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,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 - 후계농어인 육성자금 금리를 현행 2%에서 1%로 인하 -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가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확대 - 농촌여성 농정여건 개선을 위한 ‘공동체 한밥상’지원 확대 및 여성특화 건강검진, 아이돌봄사업 등도 추진 <p>□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영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 활용하고 민간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세 등 세수확대로 재원마련 	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7	민생경제는 살리고 국민 부담은 낮추고	정책분야	보건복지/ 재정경제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영업자·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○ 자영업자·은퇴자·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○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○ 가계 세 부담 완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文정부의 경제파탄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부가가치세법」 개정을 통해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간이과세 기준 상향조정(現 4,800만원→1억원) - 최저임금 업종별·규모별 구분적용 - 농어민,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강화 및 고용·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○ 자영업자·은퇴자·실업자의 건강보험료 인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으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제로 즉시 일원화 하여 자영업자·은퇴자·실업자의 건강보험료를 개편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국가재정법」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여 국회에서 심의(국민의 보험료와 세금 지출에 대해 꼼꼼한 심사), 국민의 보험료 인상 저지 ○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정예산(국가예산 대비 현재 3% 미만)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확대 -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'(가칭)농어업인 연금제'를 추진 - 농업통계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신설(가칭 '농업축산통계국') -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(「수산직불제법」 개정) -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개정) ○ 가계 세 부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녀자·자녀·어르신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확대 및 혼인·이사·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-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 제거(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) -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영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분 활용 	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8	대한민국의 미래, 청년·벤처 육성	정책분야	재정경제/ 문화관광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 일자리 창출 ○ 청년·신인 예술인의 창작활성화 ○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<p>□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의 활력을 살려, 청년 일자리 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, 유연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- 국회에서 9년째 발목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관련법 처리와 발굴에 역점 ○ 문화·체육·관광을 결합한 ‘청년 문화패스’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 18세~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·체육·관광 패스 제도 전면 시행 - 국공립 대상 기관 전시와 공연에 한해서 할인 혜택 기능만 있었던 기존 ‘문화패스’와 교통수단 할인혜택 위주의 ‘철도패스’, ‘지역별 관광패스’의 기능을 결합해 사용 분야와 할인 혜택을 전국단위로 통합확대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관광진흥법」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와 여가생활 지원 강화,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도모 ○ ‘4전5기’ 벤처생태계 환경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혼재된 벤처 관련 규제 정책의 총괄 조정을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일원화 - 「제도전 지원확대를 위한 특별법」(가칭) 제정으로 ‘4전5기’ 성실실패 구제제도 및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 공제제도 정비 ○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인재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공정거래법」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(CVC) 소유를 허용 - ‘민간 중심의 벤처·스타트업 육성 타운’ 및 ‘글로벌 파트너스 센터’ 조성, 4차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벤처 캠퍼스 조성 - 블록체인(5천억원), 소프트웨어 인재펀드(3천억원) 조성 및 지원 확대 <p>□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영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은 33조원 규모 	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9	따뜻한 동행, 'Go Together'	정책분야	보건복지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종아동 제로 사회 구현 ○ 이산가족·납북가족·국군포로가족 명예회복 ○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○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(보상금, 수당) 지급 시스템 마련 ○ 참전명예수당 인상 ○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○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<p>□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종아동 제로(ZERO)사회 구현(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종아동이 가족과 만날때까지 유전정보 보존 -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지자체 등에 보관 중인 폐쇄된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산화 시행 ○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(30%→40%) ○ 이산가족, 납북가족,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납북자·국군포로 생사확인요청과 송환 공식 요구 -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수시상봉, 서신왕래, 고향방문 등을 적극 추진 - 「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실질적 위로금 지급 ○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- 제3국 출생자녀의 제도적 차별 개선(양육가산금, 교육지원금 등) - 북한이탈주민 新이산가족화 방지를 위한 취업 및 창업기회와 정착지원금도 확대 - 親정부 성향 단체 편향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차단, 모든 단체에 골고루 지원,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에 북한이탈주민 임용 확대 			

-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(보상금, 수당) 지급 시스템 마련
 - 전체 예산 대비 1.1%대인 보훈예산 비중 단계적 확대, 대상자별 적정 보훈 보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집행
 - 보훈급여금 병급(이중지급) 금지제도 합리적 개선과 전상 수당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추진
 -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금,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
-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이상으로 인상(1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% 이상)
- 위탁병원 의료 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
 -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 확대(감면대상 기준인 75세 연령 제한 폐지)
 -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약제비용 지원
 - 지역별 위탁 병원 확충 및 관련 예산 대폭 반영
-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
 - 현재 만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
 - 300㎡~500㎡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
 -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,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
 -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, 보급 (시청각장애인 73% '재난보도 사각지대')
 -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'점자 스마트워치' 보급 확대
 -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, 의료비,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국가재정운영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, 남북협력기금 재원축소분을 활용
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은 33조원 규모
 -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 3,100억원
 -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전출금 1,000~2,000억원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한국당		
정책순위: 10	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	정책분야	재정경제/ 문화관광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○ 어린이집 급식비 공공기관 수준으로 향상 ○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조성 ○ 다자녀[3자녀 이상]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<p>□ 이행방법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난임시술에 있어 지원 횟수제한, 소득기준, 연령차별 폐지 - 시술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난임시술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 -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남성 난임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○ 어린이집 급식비를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어린이집 최저 급식비와 간식비를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, 140만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-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공표 의무화 및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 ○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공중화장실 신규 건립시) 아동 전용 낮은 세면대 설치, 수전위치 변경, 아동용 좌변기·소변기 설치, 아이 키에 맞춘 핸드드라이어 설치 - (기존 공중화장실의 경우) 아이용 세면대 발판 비치, 보조좌변기 및 변기 디딤대 비치, 핸드드라이어 위치 변경 - 남녀화장실 모두 유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‘우리아이 눈높이 화장실’ 동일하게 추진 - 유모차 출입이 가능한 ‘가족화장실’ 등 확대 ○ 다자녀(3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모든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확대 지원 <p>□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영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분 활용 			